



10월 14일 열린 성낙인 총장의 학생 사찰 규탄 기자회견.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

돈 벌이에 눈이 먼 학교 당국에 맞선 본부 점거 지지한다

10월 10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전체학생총회를 성사하고, 시흥캠퍼스 철회를 요구하며 본부 점거에 들어갔다.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추진은 법인화된 서울대학교의 현 주소를 보여 준다. 수익성 추구하고 맹목적 경쟁을 위한 양적 팽창이라는 논리가 이 사업 곳곳에 스며 있다.

서울대 당국은 2007년 발간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서 대학을 "국제화"해야 세계 10위에 진입할 수 있다며 시흥캠퍼스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 당국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시흥캠퍼스는 부동산 투기 사업으로서 효과를 발휘했다. 시흥시에 2천~3천 명 규모의 기숙형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들쭉였고, 한라건설은 캠퍼스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 큰 이익을 누렸다. 그 대가로 서울대 당국은 시흥시에 부지 20만 평과 최대 4천5백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시흥캠퍼스로 건설사와 서울대 당국은 돈 잔치를 벌였지만 합당한 이유도 없이 학교를 시흥시로

다니게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학생 수천 명을 보내는 대신 돈 거래가 오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서 "대학이 학생들을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학교 당국은 시흥캠퍼스를 "제대로 된 산학협력단지"로 만들겠다고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원 받은 4천5백억 원으로 건물을 지은 뒤 이후 재원도 산학협력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십만 평이나 되는 캠퍼스를 기업의 지원에 의존해 운영한다면 대학 운영에 기업의 입김은 더욱 강화되고, 서울대의 기업화는 더욱 부추겨질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기업이 입김이 커지고 수익성 논리가 강화될수록 학문은 왜곡되고, 구성원들의 처지는 더 악화된다. 이는 지난 5년간 법인화된 서울대가 보여 주고 있다.

법인화 이전 5년 보다 이후 5년 동안 교단을 떠난 전임 교수는 41퍼센트나 늘었다. 강화된 성과 압박이 퇴직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대는 법인화 전환 이후 재정난을 호소하며, 전체 직원의 최대 16퍼센트를 감축하는 조직개편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법인화 직후인 2012년부터 매년 1백여 명씩 늘어 왔다. 그래서 서울대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국립대 2위에 달한다. 음대 시간강사 해고 문제, 비 학생 조교

기간제법 위반 문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문제 등 부당한 처우를 겪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교직원의 처지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총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학내 민주주의는 후퇴해 왔다.

비민주적이고 친 기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캠퍼스는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내팽개친 채 기업처럼 변하고 있는 대학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돈 벌이에 눈이 먼 학교 당국의 비민주적인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선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점거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어야 한다.

'산학협력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일부 학생들은 대학 당국의 비민주적인 사업 추진은 반대하면서도,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산학협력은 공짜가 아니다. 기업과 연계 강화가 학문과 교육을 왜곡한다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당장 가슴기 살균제 사건은 서울대 학교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 기업의 의뢰를 받은 교수가 유독성이 없다는 엉터리 실험 보고서를 작성했다. 황우석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도 이윤 논리가 대학과 학문의 가치를 추락시킨 대표적 사례다.

미국에서는 켄터키대학이 나이키와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 측이 나이키 브랜드나 제품을 비판하면 2천5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침

▶ 뒷면으로 이어짐

본부 점거 투쟁,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10월 10일 학생총회에는 정족수를 훌쩍 넘는 2천 명이 참가했다. 2011년 법인화 반대 비상총회 뒤 5년 만에 학생총회가 성사된 것이다.

실시협약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총회에서는 압도 다수가 시흥캠퍼스의 "전면 철회" 요구를 지지했다. 졸속적인데다 학생들의 목소리도 배제하며 시흥캠퍼스를 추진해 온 대학 당국은 마지막까지 날치기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대학 측에 학생들은 신물이 났다. 강경하게 투쟁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 명백했기에, 학생들은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행동방안으로 "본부 점거 투쟁"을 의결하고 행동에 나섰다.

이미 체결된 협약을 철회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투쟁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거나 법안 자체를 폐기한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70년 전 미군정은 서울대를 법인화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동맹휴업을 비롯한 학생들의 투쟁 끝에 3년 뒤 서울대는 다시 국립화됐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철회시키는 투쟁은 짧은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만큼 승리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투쟁 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점거 농성을 중심으로 기층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24시간 가동되는 점거 농성장은 이런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심점 구실을 할 수 있다.

2011년 법인화 반대 투쟁 당시 총학생회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 당시 총학생회는 법인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전망에 짓눌려 기층의 동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소홀했다. 대신 학교와의 협상에 치중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은 기세 등등해진 학교 당국과 더욱 보잘것없는 협상안이었다. 심지어 당시 총학생회는 본부



10월 10일 서울대 학생 총회.

측에 이면합의를 제안한 사실이 폭로돼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지금 대학 당국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측의 태도를 바꿔 놓으려면 기층의 압력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점거 농성을 구심점으로 시흥캠퍼스의 문제를 알려 나가며 투쟁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또 이화여대 학생들처럼 규모 있는 총시위를 조직해야 한다. 곧 있으면 학생회 선거에 돌입한다고 해서 점거 농성이 이완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 문제와 함께 서울대학교가 갈수록 기업처럼 운영되는 문제도 강조해야 한다.

학교 당국은 시흥캠퍼스를 "제대로 된 산학협력단지"로 만들겠다고 기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흥캠퍼스를 운영할 재원도 산학협력으로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추진이 대학 운영을 기업의 시장 논리에 더욱 종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 가슴기 살균제 사태 등은 기업의 이윤 논리가 학문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잘 보여 줬다. 법인화 이후 수익성 논리가 강화되면서 교수들

에게 성과 압박이 강해지고, 비정규직 교직원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수업의 질을 악화시키므로 학생들에게도 전혀 이롭지 않다.

대학 기업화 반대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대학 학생들과 교직원, 운동단체들로부터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는 구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지와 연대의 확산은 <조선일보> 등 우파 언론의 악의적 왜곡을 무력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셋째, 점거 농성에 실제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점거 농성의 운영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이는 앞서 말한 제안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점거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면 더 많은 학생들과 학생회 대표자들이 점거 자치회와 본부점거본부에 실질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점거에 참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점거 참가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갈수록 학생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때문에 그릇된 주장을 하기 십상이다. 반면 투쟁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더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생각과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2011년 법인화 반대 점거 농성 때 많은 학생들이 열의 있게 참가했지만, 헌신적으로 점거 농성을 한 학생들이 주요 사안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지는 못했다. 심지어 당시 점거 농성자 전체 토론에서는 점거 유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전학대회는 점거 해제를 결정했다. 헌신적으로 점거농성에 참가했던 많은 학생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2011년도 투쟁을 교훈 삼아, 점거에 열의 있게 참가한 사람들이 점거 해제를 포함한 운영 방침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점거 참여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려면 학교 당국과의 협상에도 점거 농성장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점거 농성을 끝낼 시기나 학교 당국의 양보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 등도 농성자 전체 회의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

끈질기게 점거를 유지하고, 연대를 확대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꼭 철회시키자!

이시현(서울대 자유전공학부)

▶ 앞면에서 이어짐

목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김이 강화될수록 대학 교육도 왜곡된다. 당장 기업 이윤에 도움이 되는 학과는 집중 지원을 받지만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학과는 지원이 축소된다. 상대평가제가 강화되거나 졸업요건 등이 강화되는 것도 학생들을 기

업주들이 착취하기 알맞은 노동력으로 만들려는 논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또 대학에 기업들은 많이 들어오지만 학생들을 위한 시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재정 지원은 늘었는지 몰라도 수익성 논리가 강화되며 교직원들의 처지는 더 열악해졌

다. 교수들에게 연봉제·계약제·성과제 등이 확산되며 경쟁 압박이 강해지고, 비정규직 교수와 직원도 늘어났다.

법인화 이후 기업 논리가 강화되면서 총장직선제는 폐지됐고, 최근 학생 사찰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학교의 방향에 저항하는 학생들에 대한 뒷조사와 탄압도 강화된다.

다른 대안은 존재한다. 교육에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돈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 대학 기업화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